

## 과학기술부 「2007 주요 업무계획」 발표

- 올해 9대 전략목표, 30개 이행과제 추진 -



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8일 올해의 주요 업무계획을 담은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 육성, 기초·원천기술 경쟁력 강화 등 9대 전략목표를 설정, 이의 실천방안으로 30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 중심의 선진한국 건설'을 비전으로 설정한 올해 9대 전략목표를 살펴보면 ▲과학기술 혁신 체제 고도화 ▲국가 연구개발(R&D)투자 확대 및 효율성 극대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성과 창출 촉진 ▲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확대 ▲원천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신기술·신산업 창출 ▲과학기술 대중화 및 안전한 연구환경 확보 ▲과학기술의 세계화 ▲원자력 안전성 제고, 평화적 이용 확대, 차세대 에너지기술 개발 ▲독자적 우주개발 능력 확보 및 우주 강국 진입 등이다. 과기부는 이 같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비전 2030'의 핵심요소인 혁신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이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미래 성장동력 확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대형 국가연구개발실용화 사업, 21세기 프런티어연구개발 사업 등 3대 성장동력 사업의 성과창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개발서비스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과학기술기반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되, 정부출연 연구기관별로 비교우위가 있는 강점 기술분야에 연구역량을 집중하는 '톱 브랜드 프로젝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출연연간 협동연구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가 연

구개발(R&D)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신규 국가R&D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과 관련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총사업비가 1천500억~3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 50여 개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직접 사업의 성과와 추진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도 실시하게 된다. 생명공학(BT)분야의 경우 제2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2008~2017년)을 통해 바이오소재, 노화 제어 등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나노기술(NT)분야에서는 테라급 나노소재, 나노소재, 나노메카트로닉스 등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력 강화가 긴요한 부문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기초연구 사업 중 개인연구에 대한 지원비중은 지난해 35.7%에서 2011년까지 60% 수준으로 확대,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적극 발현될 수 있도록 하고, 수혜의 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위성 강국 진입을 위해 2008년 과학기술 위성 2호를 우리 땅에서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위성발사체 개발과 발사장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우주사고손해배상법 제정과 우주개발전문기관 육성 등 우주산업시대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또 미래 에너지 주권국의 기틀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핵융합에너지 원천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특히 8월 완공되는 차세대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KSTAR)를 국제적인 핵융합 공동 연구시설로 활용함으로써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에서 주도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관한 지원시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신설하고, 핵융합 연구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전문연구기관도 운영키로 했다. 초·중등 단계에서의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과학영재가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취업·연구활동·은퇴에 이르기까지의 전주기적인 육성·지원책도 강화되며, 과학신동에서 이공계 장학생으로 이어지는 과학영재 교육·지원시스템 운영에는 올해 총 1천12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과학기술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해 과학방송채널을 신설(2007. 7)하고 국립과학관의 확충(광주·대구)을 추진하는 등 국민이 과학기술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이와 같은 전략목표와 이행과제의 추진을 통해 2010년까지 우리 나라의 과학 경쟁력을 세계 10위, 기술 경쟁력을 세계 5위권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우리 나라는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과학경쟁력 세계 12위, 기술경쟁력 세계 6위를 기록한바 있다.

## 8차 교육과정 확정, '과학·기술'군은 그대로

지난 1월 10일 과총을 비롯한 과학기술관련 6개 단체는 과학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추진중인 8차 교육과정 개편안과 관련해 '수학', '과학', '기술·가정'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과목군으로 설정하고 모든 학생이 이들 과목군에서 각각 2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게 하는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 개편이 자칫하면 초중등학교의 수학과 과학 교육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

성명 발표 이후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다. 조선일보는 1월 11일자 '국가 백년대계를 이야기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과학단체들의 수학·과학 교육 위기론은 절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경고"라며 "수학과 과학 교육의 혁명이란 국가백년대계를" 촉구했으며, 한겨레신문도 같은 날짜 '위기의 수학 과학교육, 혼드는 교육당국'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교육부는 수학과 과학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라는 과학기술계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2월 8일자 '위기의 과학교육, 나라의 희망이 꺼져간다(2월 8일자)'는 제목의 사설을, 중앙일보는 '교육과정 개편에 수학·과학 강화 방안 나와야(2월 8일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내기도 했다. 이밖에도 한국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전자신문,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주요 일간지는 연일 8차 교육과정 개편안에 관한 과학기술계의 입장과 요구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월 23일 8차 교육과정에서는 과학·기술군을 그대로 두고 고등학교 1학년의 과학 수업 시간만 주당 3시간에서 4시간으로 1시간 늘리기로 하는 등의 최종 확정안을 발표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과학교육은 '선택' 아닌 '필수' 이기에 '수학', '과학', '기술·가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의 근본적인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어서 향후 큰 진통이 예상된다.

## 올 7월부터 '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실시

- 정통부 업무계획서 밝혀 -

올 7월부터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악플'이나 'UCC(네트워크제작영상물)' 배포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인터넷 실

명제(본인확인제)가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또 명예훼손 등 분쟁가능성이 있는 게시판 정보를 사업자가 취장 30일간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가 시행되고, 개인정보 취급절차 변경, 신규 시스템 도입 등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해 스스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 도입된다.

정통부신부는 최근 '2007년 연두 업무계획'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등의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정보사회 역기능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포털이나 공공기관 등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제(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정통부는 이밖에 와이브로(휴대인터넷)·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RFID(전자식별) 등 한국 IT산업의 차세대 먹거리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부산·대구, 과학연구단지로 신규 지정

부산, 대구 2개 지역이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2007년도 신규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됐다. 부산과학연구단지는 강서구 송정동 일원 21만9천 평 규모로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 유치 공간 확보 및 우수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구축 및 과학기술교류의 장을 위해, 그리고 대구단지는 달서구 성서3차 지방산업단지에 총면적 100만7천 평 규모로 지역대학, 연구소와 기업간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공동연구 및 중소기업을 위한 R&D 센터 건립을 위해 지정했다고 최근 과학기술부가 밝혔다.

정부는 과학연구단지가 지역의 연구개발 거점으로서 기능하여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및 지역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이미 지정된 광주, 전북, 충북(오창), 강릉 과학 연구단지를 포함하여 2010년까지 총 10개 이내로 과학연구단지를 지정, 육성할 계획이다.

지정된 과학연구단지에 대해서는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으로 5년간 총 150억 원의 범위내에서 정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하되 지방자치 단체가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할 방침으로, 과학연구단지와 연구개발특구간 협력체제를 구축·지원함으로써 우수한 과학연구단지가 연구개발특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과학연구단지에 입주한 기관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시

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적 참여 및 민간기술개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지원하게 된다.

##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착수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에 본격 착수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2006년도에 32개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8조 9천96억 원의 연구개발과제 현황과 주요 연구성과에 대해 실시하고 특히, 금년부터 국내특허 및 SCI 논문에 대한 성과검증시스템을 가동하여, 부정확한 연구성과의 제출 입력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는 2006년도에 18개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6조 4천796억 원의 205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중 주요 51개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직접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154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별 자체평가와 국과위의 상위평가를 실시한다.

특정평가는 사업기간 10년 이상 총사업비 1천500억 원 이상인 장기 대규모 사업, 중복방지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평가등급 및 점수와 구체적인 사업개선 방안을 평가의견으로 제시하고, 중복방지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한 사업군(群)에 대해서는 부처간 역할분담 등 조정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자체평가는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등급 부여기준을 강화하고, 온정적으로 자체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위평가를 통해 평가등급 및 점수를 조정하는 반면, 자체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부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체평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일정을 보면, 1월부터 조사·분석 및 평가 자료를 관계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6월까지 평가 등을 완료하고, 평가결과는 2008년도 R&D 예산조정·배분, R&D 사업구조개선 및 정부업무평가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제2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 수립 착수

앞으로 10년 동안 국가차원의 뇌분야 연구개발, 인력양성, 인프

라 구축 등 뇌연구 촉진을 위한 장기 마스터 플랜이 마련된다.

정부는 제1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1994~2007)이 올해말로 종료됨에 따라 후속으로 제2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2008~2017)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뇌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회의를 지난 1월 16일 과학기술부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년 동안의 국가전략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전제하에 절차적 합리성 제고를 위해 정책품질관리 및 갈등관리 카드를 적용하고, 내용의 충실성 및 대국민 홍보와 참여를 강화하여 정책의 공정성을 제고기로 하였으며, 또한 정책수요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여 2~8월에 초안을 마련하고, 8~10월 공청회, 부처협의 등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10~11월 뇌연구촉진심의회(위원장: 과학기술부 차관)에서 확정기로 했다.

뇌 분야는 21세기 인류가 개척해야 할 최후의 과학기술영역이며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과학기술로, 뇌는 그 크기는 비록 작지만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접근하기 어려운 신비의 세계로 남아 있으며, IT, BT, NT 등 신기술이 융합되어 타학문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분야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공포

- 2월 8일 과기부 훈령으로 -

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들의 연구윤리 확립 및 공정하고 체계적인 연구진실성 자체검증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공통기준을 담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지침”)’을 2월 8일 과기부 훈령(제236호)으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 지침은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사건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연구윤리 확립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이후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지난해 6월 마련되었으며, 근거법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2007. 2. 8)이 이루어짐에 따라 본격 시행하게 된 것이다. ㉔

정리 | 이창규\_ 과총 미디어팀장 lck@kofst.or.kr